



코스피	2064.52 (-11.05)	코스닥	683.09 (-3.24)
금리 (미국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23.00 (+6.60) (14일)



**[해설]**  
R의 공포  
한국경제 패닉  
기업가 정신 깨워라  
03

### 靑 경제행보 총력 환경 리스크 복병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직면했다. 바로 '환경'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까지 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정부 정책의 누수 현상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 '2부제-경유차 제한' 국민 책임만 잔뜩, 정부는 뒷짐

# 空約된 '미세먼지 30% 감축'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가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수도권 및 10개 시·도로 확대 발령한 게 이를 방증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때 발령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혹은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171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지난 해 3월25일의 99 $\mu\text{g}/\text{m}^3$ 이었다.



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로 갇혀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10개 시·도 확대 발령**  
**경유차 제한 차량 2부제 등 국민에 저감 초점 맞춰져 靑 대책 질타 청원글 빗발**

경유 차량의 운행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차량2부제는 홀수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세먼지,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창원시작: 2019-01-14] [창원마감: 2019-02-13] [창원인원: 7]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미세먼지. 지금당장은 아무이상없겠지만 알겠은 존재. 어딘가요 살기좋은나라 국민이행복한 나라 같습니다. 유입은 백년전부터 그 심각성을 알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작 드려요. 이 심각성을 빨리, 대책은 의 현실을했습니다. 영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17년 4월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공약**  
[창원시작: 2019-01-14] [창원마감: 2019-02-13] [창원인원: 35]

[17년 4월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공약] 미세먼지 정권입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공약이 우리 ... 달고 있어서 안달았습니다. 온 방송, 뉴스,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블로그 등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정권입니다. 영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미세먼지 나쁠때 단속엄무라도! 남편들 살려주세요.**  
[창원시작: 2019-01-14] [창원마감: 2019-02-13] [창원인원: 1]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상태입니다. 재난문자도 있고 저감조치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은 결석하면 됩니다. 장만에 갈게서도 있지만 바람에서 일하는 남편은 걱정입니다. 마스크 쓰면 아직도 눈치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입니다. 무지한 멍청한 사람들이 연쓰는거

HOME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미세먼지 문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청와대 홈페이지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저감 초점이 '국민'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또 다른 청원인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을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달라. 미세먼지 없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불

만을 터뜨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청원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주 출범식에서 출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금융지주 4년 만에 부활 적극적 M&A로 '1등 금융' 탈환

우리금융지주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4년 11월 민영화를 위해 해체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사로 부활하면서 5대 금융지주 시대가 열렸다. 우리금융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리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위해 비은행 부문 M&A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은 직접 인수하고, 증권 등 M&A 규모가 큰 곳은 다른 곳과 같이 공동 투자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는 것은 향후 2~3년 내로 보고 있다. 올해 공격적인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익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 그는 "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다른 금융그룹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와 내년에 적극적인 M&A로 1등 금융그룹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자산만 따지면 현재 은행이 지주 이익의 99% 수준인데 7대 3 또는 6대 4의 비중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고, 그룹내외에서 선발된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추진

**M&A 본격화**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우리FI 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 자산운용 등 6개사를 자회사로 출범한다. 우리카드와 우리저축은행을 상반기 내로 지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손 회장은 "카드와 저축을 지주로 편입할 경우 우려하는 오버행(대량 대기매물)이슈를 없애기 위해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저축은 100% 현금매입, 카드는 50% 가량 현금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주편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딩뱅크 경쟁에 본격 뛰어드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완전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을 매각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의 지분 18.4%를 보유하고 있다.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27.2%다. <8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

## "미세먼지 악화"... 탈원전 반대서명 23만명

한전 2억t 온실가스 배출 석탄화력 발전량 41%로 ↑ 원전 비중 줄고 석탄 증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 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

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론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

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탄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우승준 기자